

文대통령 “MB, 노무현 죽음 거론... 분노”

李 기자회견 하루만에 입장문 발표 “정치보복 운운은 정부 모욕... 사법질서 부정·정치근간 벗어난 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을 운운한 데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이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 부정이며 정치근간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개혁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이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아침 회의에서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내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이 대통령 말씀 그대로다”면서 “어제 청와대 입장이 없다는 표현은 당시로서는 내놓을 입장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입장

을 말씀드리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일이라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는 것 같은 표현이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직접 거론한 것은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 입장에는 노 전 대통령 죽음이 직접 거론된 것에 대한 불쾌함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은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 대통령의 분노가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그동안 국민통합을 중요하게 여겨온 대통령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지지층도 국민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것도 국민”이라며 “국민통합이 무조건적 인내는 아니다. 국민통합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때가 되면 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수정권이었던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그런 불행의 역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쨌든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내만 하라는 것은 또다른 무책임이라 생각한다. 금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광수,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 갑)은 18일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 시민단체 YMCA와 국회 정론관에서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기자회견을 가졌고, 관련 단체들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행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가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국가예방접종) 중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감염병감시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수두환자는 4만 6330명에서 2016년 5만 406명으로 16.7%나 증가, 이중 9세 이하가 전체의 79.9%였다.

수두는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이며 1년 내내 전국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국가예방접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도 2006년부터 수두 예방접종을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다. 그렇기에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을 통해 유아 청소년 환아의 안전과 질 높은 치료환경을 도모하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통합반대와 “安-劉 보수패권 야합 선언”

“이제 결별할 때가 됐다” “비례대표 인질 잡는 安 이해 못해”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는 18일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공동 통합 선언에 대해 “보수패권 야합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차기키문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이날 안 대표와 유 대표 통합선언 직후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의 통합 선언은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지루한 말잔치”라며 “미사여구와 공약을 남발했지만 안철수 새정치의 타락, 유승민 보수개혁의 공허함을 목격한 국민에게는 흘러간 유행가의 재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가 곳곳에서 일고 있는 시점에 두 대표의 뽕푹맞은 보수대야합 통합 선언은 촛불혁명을 거부하는 반역이고 평화개혁 세력과 대결하려는 반민주적 시도”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점점 거세지는 보수대야합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변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늘 선언으로 양당 내부에서 합당 반대 불길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분당 위기에 처한 꼬마 안철수, 꼬마 유승민의 마이너스 합당은 보수패권 야합으로 다당제를 죽이고 한국정치를 무한 대입 구제제로 퇴행시킬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유 대표는 최소한의 의원총회를 열어 합당 토론 및 총의를 모았다. 그런데 안 대표는 의원총회도(참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신이 모든 공수를 동원해서 추진한 합당 전당대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무슨 근거로 오늘 합당을 선언 하나”라고 반대와 반발에도 통합을 기정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차기키문동본부 유성엽 의원이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통합선언문 발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장영남 박현주 유성엽, 김광수, 최경환 의원.

사실화한 안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또 안 대표 측과의 “중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당권파들의 행태, 당부위를 열고 당규를 개정하고 의원총회를 거부하는 행태를 볼 때 이미 신뢰는 무너졌다”며 “이제 결별할 때가 됐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를 그렇게 추구해온 분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인질로 잡고 묶어두겠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상식에 맞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발언,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출당을 요구했다. /뉴시스

공정위 부위원장에 지철호 中소중앙위 상임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지철호 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사진)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 출신인 지철호 선임 부위원장은 1987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시작, 20여년간 공정거래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공정위 부신서무소장·제도개선과장·기업결합팀장·독점감시팀장·대변인 직무대리·카르텔정책국장·경쟁정책국장, 공정거래위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뉴시스

심리전단 전 팀장·외곽팀장 3명 불구속기소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이끌었던 외곽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음주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사를 종결짓는다는 계획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이날 국가정보원 위법(정치권여), 공직선거법 위법, 위증 등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와 늘푸른희망연대에서 활동한 차미숙씨를 포함한 외곽팀장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2012년 12월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및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동원, 정치권여 활동 및 불법 대선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에 출석해 외곽팀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로도 적용됐다.

차씨 등 외곽팀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활동비 수억원을 받아가며 포털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권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외곽팀 규모와 활동 횟수 등에 따라 1억8000만~4억50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2일 사이버 외곽팀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 양지희 전·현직 간부 및 외곽팀장 등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고, 댓글부대 운영의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단장도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댓글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원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내주 관련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